

민주당 경선 끝났지만... 전남·광주 곳곳 잡음·갈등 지속

6·3 지방선거 D-28

통합시장 ARS 여론조사 오류 후폭풍
기초단체장도 명부 유출·대리투표 논란
정치권 “깜깜이 공천” 구조 개선해야
득표율·심사기준 공개 검증 요구 확산

6·3 지방선거가 1개월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의 광주·전남지역 경선이 대부분 마무리됐지만 경선 과정에서 불거진 각종 논란과 반발은 좀처럼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 관련기사 2·3면
초대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후보 경선 과정에서 발생한 ARS 여론조사 오류 논란을 비롯해 기초단체장·지방의원 경선에서도 권리당원 명부 유출, 대리투표 정황, 금품수수 의혹, 재심신청 등이 잇따르면서 공천 신뢰도 논란이 확산하는 모양새다.

5일 지역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후보 경선에서는 결선 투표 ARS 여론조사 과정에서 전남 거주자로 응답한 조사 대상자 2천308명의 전화가 중도 종료된 사실이 확인돼 공정성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민주당은 최근 당무위원회 직후 브리핑을 통해 “기존 ARS 설계를 적용하는 과정에서 혼선이 있었지만 즉시 발신을 중단하고 시스템을 보완해 투표를 재개했다”며 절차상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경선에서 탈락한 김영록 전남지사는 지난 4일 전남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깜깜이·불공정으로 얼룩진 결선 투표에 대한 철저한 재조사와 로우 데이터 공개, 중대한 오류와 실수가 인정된다면 경선 무효화 등 책임있는 대책이 강구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기다려도 즐거운 어린이날 어린이날인 5일 광주 북구 패밀리랜드를 찾은 가족 단위 나들이객들이 놀이기구를 타기 위해 줄을 서 있다. ▶ 관련기사 4면 / 조영권 기자

그러면서 김 지사는 “결선 과정에 불거진 ARS 맥동 등 사안은 엄연히 민주주의 선거 과정에서 선택권을 박탈당한 전남·광주 시·도민의 주권 침해”라며 “이는 민주당의 지을 수 없는 오점이자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국민권선수광주전남민주시민연대는 민주당 통합특별시장 경선 결과의 공정성을 수사해달라는 내용의 고발장을 서울경찰청에 제출하기도 했다.

통합특별시장 후보 경선 운영 방식을 둘러싼 비판도 끊이지 않고 있다.

민주당은 정책 검증 강화를 위해 정책배심원도 논의를 도입했지만 배심원단에 투표권이 부여되지 않으면서 실질적 영향력은 제한적이었다는 지

적이 나온다. 또한 장기간 이어진 경선 과정에서 정책 검증보다는 후보간 공방만 격화된 데다, 득표율, 득표율, 원자표 등이 공개되지 않으면서 경선 결과를 둘러싼 불신을 자초했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전남 기초단체장 후보 경선에서도 잡음과 갈등이 지속되고 있다.

여수시장 경선에서는 권리당원 141명의 이름과 연락처 등이 담긴 명부 유출 의혹이 제기돼 민주당이 권리당원 반영 비율을 기존 50%에서 20%로 낮추고 여론조사 비중을 확대하는 방식으로 경선 룰을 변경했다.

순천시장 경선에서는 최종 후보로 확정된 손훈호 후보를 둘러싸고 금품수수 의혹이 제기돼 민주당 중앙당이 조사를 벌이기도 했다.

화순에서는 대리투표 의혹이 불거져 전락선거구 지정과 재투표가 진행됐고, 장성에서도 일부 주민의 대리투표 정황이 적발돼 경선 중단 뒤 재개 등 혼선이 잇따랐다.

무안에서는 김삼 후보가 최종 후보로 선정됐지만 선거법 위반 의혹이 제기되면서 경쟁 후보들이 사퇴를 촉구하기도 했다.

광역·기초의원 공천 과정 역시 형평성과 부실 검증 논란이 계속됐다.

민주당은 6·3 지방선거에서 광주 광역의원 선거에 처음으로 중대선거구제를 시범 도입, 4개 선거구를 대상으로 패자부활전 성격의 2차 경선을 진행했다. 그러나 야권과 시민사회에서는 민주당 후보 늘리기에만 치중한 것이라는 비판을 쏟아냈다.

특히 ‘정치 다양성 확대’라는 중대선거구제 도입 취지와 달리 거대 정당의 독식 구조를 강화하기 위한 수단으로 변질됐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결과 또한 논란이다. 광선5선거구에서는 과거 음주운전 사실을 장기간 숨겨 시의회 제명 투표와 당직 정지 징계를 받았던 후보가 경선을 거쳐 공천됐고, 서구3선거구에서는 과거 공무원 폭언 논란이 있었던 후보가 단독 등록으로 공천장을 받았다.

남구2선거구에서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는 후보가 재심을 통해 공천 경쟁에 복귀했고 북구1선거구에서는 경선 이후 성 비위 의혹까지 제기됐다.

또한 서구·가다 선거구에서는 경선 승리 후보의 사퇴 또는 공천 취소 이후 탈락 후보를 다시 공천하기로 하면서 공천 기준의 일관성 논란도 불거졌다.

현역 평가 하위 20% 감소 적용과 중대선거구 2차 경선·순위투표 과정에서 가깝점 적용 여부를 둘러싼 형평성 문제도 도마 위에 올랐다.

이에 따라 지역 정치권에서는 민주당 독점 구조 속에서 경선 자체가 사실상 본선 역할을 하는 만큼 공천 과정의 투명성을 대폭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특히 투표율과 득표율, 심사 기준, 재심 판단 근거 등이 충분히 공개되지 않아 각종 의혹이 제기돼 검증이 어려운 데다, 대응 과정 역시 불투명하다는 지적이다.

경선 관리 기준을 사전에 명확히 제도화하고 후보 검증 절차와 경선 관련 정보를 보다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는 요구가 확산하고 있다.

지역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경선 과정에서 각종 잡음과 의혹이 반복되는 것은 유권자와 후보 모두 결과를 검증할 수 있는 장치가 부족하기 때문”이라며 “투표 결과와 심사 과정 등이 대부분 비공개로 진행된다 보니 불신과 시비가 커질 수밖에 없는 만큼 보다 투명한 경선 관리 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재형·변은진 기자

李대통령, 민주당에 ‘조작기소 특검’ 속의 당부

국민 의견 수렴·신중 판단 요청
與 지방선거 이후 처리 가능성 ↑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4일 더불어민주당에서 추진 중인 이른바 ‘조작기소 특검’과 관련, “구체적인 시기와 절차에 대해서는 여당인 민주당이 국민적 의견 수렴과 속의 과정을 거쳐서 판단해 달라”고 당부했다. ▶ 관련기사 4면
홍익표 청와대 정무수석은 이날 브리핑에서

“특검을 통해 진실을 규명하고 사법적 정의를 바로세우는 것은 반드시 해야 할 일”이라며 이 대통령이 이같이 언급했다고 전했다.

이어 홍 정무수석은 “이번 국정조사를 통해 윤석열 정권과 정치 검찰에 의해 자행된 불법행위 및 부당한 수사가 상당 부분 밝혀졌다”며 “이를 바로잡기 위한 특검 수사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설명했다.

특검 수사가 필요하다는 점에는 동의하면서도, 세부 절차나 시기를 정하는 데 있어서는 더

신중한 속의가 필요하다는 게 이 대통령의 메시지로 읽힌다.

구체적인 시기 역시 속의에 따른 민주당의 판단 영역으로 남겨뒀다는 게 청와대의 설명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시기와 절차는 당에서 알아서 판단해 결정하라는 것”이라며 “지금까지 국정조사나 특검과 관련한 것은 당이 알아서 해왔고, (앞으로) 당이 필요한 절차를 밟으면 된다”고 밝혔다.

특검이 이 대통령 관련 사건 공소 취소 권한과 관련한 질문에 이 관계자는 “여기서 제가 드릴

말은 아닌 것 같다”고 말을 아꼈다.

이에 따라 민주당이 6·3 지방선거 이후 ‘윤석열 정부 조작 수사·기소 의혹 특검법안’ 본회의 처리를 시도할 가능성이 높다는 게 지배적인 시각이다.

당초 민주당은 이달 중 ‘조작기소 특검법’ 처리를 목표로 내세웠지만, 특검법안 발의를 계기로 보수층 결집과 중도층 이탈 우려가 나오는데다, 이재명 대통령까지 특검 도입 절차에서 속의를 거칠 것을 주문하면서 속도 조절에 나서는 기류가 감지되고 있다.

정재래 대표는 5일 경기도 동두천 큰시장 유세 후 기자들과 만나 특검법안 처리 시기와 절차에 대해 “국민, 당원, 의원 총의를 모아 가장 좋

은 선택을 하겠다”며 사실상 속도 조절에 나설 것임을 분명히 했다.

정 대표는 또 “의원총회를 통해 (의원들의 의견을 모으고), 또 당원들의 뜻도 물어서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지 판단해볼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진수 기자

Today

KIA
대체 용병 아테를린
데뷔 타석 스리런포
16면

광주매일신문 에너지 절약 실천 연중 캠페인

승용차 5부제(요일제) 실천을 위한 국민행동

자원안보위기 극복을 위한 승용차 5부제에 동참해주세요!

1.6 월, 2.7 화, 3.8 수, 4.9 목, 5.0 금

출퇴근시 카풀 활성화하기, 유연근무 활성화하기, 가까운 거리는 걷거나 자전거 타기, 대중교통 이용하기

기후에너지환경부, 한국에너지공단